

여·야, 5·18 광주서 협치 물꼬 틀까

5월 정신 부합 국민통합 주목
국힘, '5·18 편휘' 김재원 징계
기념식 지도부·의원 대거 참석
민주, '돈봉투' 등 반성과 성찰
강력한 당 혁신 방안 제시해야

5·18 민주화운동 43주년을 앞두고 여야가 지극
지극한 정쟁에서 한 걸음 물러나 시대가 마주한 현
실을 되새기고 협치의 물꼬를 트면서 국민 통합의
계기를 마련할 것인지 주목된다. 내년 총선이 1년
도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5월 정신에 부합하는 반
성과 성찰, 통합의 비전 마련은 국민에게 보내는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가기 때문이다.

특히, 여야에 대한 강력한 비판 기조를 유지하
며 정중동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호남 민심은 내년
총선 판도에 결정적 변수가 될 수 있어 여야 정치
권은 5월 정신에 부합하는 일정 및 메시지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5·18 민주화운동 43주년을
계기로 호남에 대한 진정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는 방침이다. 이를 반영하듯, 국민의힘은 1일 윤리
위원회를 열고 '5·18 정신 헌법 수록 반대' 등의 실
화를 빚은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
시했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중앙당사
에서 윤리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징계 개시 결정은
국민의힘이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기 위한 자체
노력의 일환"이라며 "다음 2차 회의에서 당사자의
소명을 듣고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2차 회의는 8일 오후에 열린다.

정치권에서는 수위가 문제일 뿐, 김 최고위원
에 대한 징계는 불가피한 수순으로 보고 있다. 5·
18 민주화운동 43주년 기념식에 당 지도부는 물
론 소속 의원 전원이 참석한다는 점에서 5월 정신
에 대한 여당의 진정성이 전제돼야 하기 때문이
다. 적절한 징계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정부, 여당
의 기념식 참석 의미를 반감시킬 수 있다는 것이
다.

윤석열 대통령의 5·18 민주화운동 43주년 기념
식 참석 여부와 메시지도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5·18 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식 참석을 앞
두고 5·18 유공자 가족과 만난 자리에서 매년 5·
18 기념식 참석을 약속한 바 있다. 또 보수 정당 출
신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했고 '5·18은 현재도 진행 중인 살
아있는 역사다. 이를 책임 있게 계승해 나가는 것
이야말로 후손과 나라의 번영을 위한 출발'이라는



전일빌딩 '그해 봄날' 전시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5·18민주화운동 43주년 및 전일빌딩245 5·18기념공간 개관 3주년을 맞아 1일 광주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245에서 '이 사람을 보라' 다섯번째 전시 '그해 봄날'을 개막했다. 이번 전시는 오는 10월 15일까지
/나평주기자mjna@kwangju.co.kr

지 계속된다.

기념사도 직접 퇴고하는 등 각별한 신경을 쓰기도
했다.

지역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이번 기념식에 참
석한다면 기념사를 통해 여야에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는 등 국민
통합을 강조하지 않느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또 광주·전남지역의 미래를 이끌 대형 현안에 대
한 해법 제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5·18 민주화운동 43주년을 앞
두고 고심이 깊어가고 있다. 진보 진영의 망령을
자처하고 있는 민주당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
'5월 정신' 앞에 서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다. 대
선과 지방선거 패배에 이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
스크가 구체화되고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까지 터졌지만 제대로 된 성찰과 반성 없이 거대
야당의 기득권에 안주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
고 있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에 대한 호남 민심의 지지를
은 뚜렷이 하락하는 흐름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5·18 민주화운동 43주년
기념식 참석의 전제 조건은 민심이 공감할 수 있는
과감한 혁신안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
다. 돈 선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정당 혁
신안 마련을 넘어 현역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을 최
소화할 수 있는 과감한 공천 혁신안을 제시해야 한
다는 것이다. 과감한 혁신 조치 없이 5월 정신에

편승하는 구태를 반복한다면 오히려 민심의 역풍
을 부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 일각에서는 호남의 민
심 이반에 대해 '선택지가 없지 않느냐'는 안이한
인식을 갖고 있다"며 "5월 정신에 부합하는 강력한
혁신안을 제시하지 않고는 민주당은 차기 총선
에서 호남 민심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가능성을 배
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 5·18 민주화운동 43주년 기념
식에 참석하는 여야 대표가 '민생 협치 선언'에 나
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여야 대표가 어
렵다면 여야 원내대표 선에서라도 전세사기 사태
등 시급한 민생 현안과 법안에 대한 해법을 모색,
5월 정신에 부합하는 협치의 물꼬를 마련해야 한
다는 것이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광주군공항 이전 특별법 시행령 절차 시작

광주시, 국방부에 의견 전달

기부 대 양여 차액 산정 방식 논의

최근 제정·공포된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 부
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령을 만드는 절차
가 시작했다.

광주시는 1일 국방부를 방문해 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광주시 의견을 전달했다.

광주시는 이날 박길성 군공항이전사업단장과의
면담을 통해 기부 대 양여 차액 산정 방식 등을 논
의했다.

지방자치단체가 기존 부지를 개발해 예산을 마
련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의 부족분을 국가가 지원
하는 근거가 특별법을 통해 마련됐지만, 그 범위는
산정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관심이 될 것
으로 보인다.

특별법 공포 후 4개월 내 사업의 실질 동력인 시
행령을 만드는 일이 중요한 일인 만큼 광주시는 최
적의 시행령이 마련될 수 있도록 특별법 후속 전달
반을 구성하고 이에 대비하고 있다.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은 지난달 13일 국회
를 통과해 같은 달 25일 제정·공포됐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지원요건 6→4개 축소 제시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기준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이어
진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적용 기준 6가지
를 4가지로 줄인 수정안을 1일 제시했다.

'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라는 조건을
삭제하고, 수사 개시 외에도 '임대인의 기망'과
'바지사장에 대한 명의이전'도 조건에 추가해 적
용 범위가 일부 넓어지도록 했다.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날 열린 국회 국토
교통위 법안심사소위에 특별법 적용 요건 수정안
을 제시했다.

정부·여당이 발의한 특별법상 전세사기 피해자
로 인정되려면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이며, 임
차 주택에 대한 경·공매가 진행돼야 하고(집행권
원 포함),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했을 때 서민 임
차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수정안에서 국토부는 대항력·확정일자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
우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임차 주택에 대
한 경·공매 요건은 임대인의 파산 및 회생절차 개
시, 경·공매 절차 개시로 인해 다수의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
수정했다. 피해 주택 요건은 보증금 3억원 이하로
하는 수정안을 냈다. 단,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에서 5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보증
금 최대 4억5천만원까지 인정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광주 5·18 시설 공방이 피고 오물 얼룩 ▶6면

굿모닝 예방-나눔, 문화와 세상 바꾼다 ▶18·19면

손흥민 10호골...7시즌 연속 두자릿수 득점 ▶22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바이탈뷰티

신체 본연의 생기와 활력을 되살려주는 홍삼의 명작

명작수



구매문의 : 아모레퍼시픽 카운셀러를 통해 구매하세요. 080-023-5454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조원 및 판매원 : (주)아모레퍼시픽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